

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, COP29에서 개도국 기후재정으로 연간 3,000억 달러 지원에 합의

- UN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이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2035년까지 연간 3,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데 최종 합의하였음.¹⁾
 - ‘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(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, NCQG)’는 COP29의 핵심 의제였으며, 이번 합의에 따라 기후재정이 기존의 연간 1,000억 달러에서 3배 확대될 것이나, 당사국들이 이번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었음.²⁾
 - 게다가,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 상승을 1.5℃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저소득 국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간 1조 3,0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평가함.³⁾
 - 해당 금액은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는 자체 투자에 더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데, 과학자들은 투자 규모가 상기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구온난화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, 그에 따른 영향을 되돌리는 것도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봄.
 - 그러나 COP29에서 타결된 합의문에는 민간 기업과 국제 금융기관(세계은행 등)이 부족한 부분을 메울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, 일각에서는 이를 선진국을 위한 면책 조항으로 평가함.
 - 최종 합의는 당초 예정된 폐막일을 이틀 넘긴 11월 24일에 타결될 정도로 당사국들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, 당초 일부 선진국들은 기후재정을 총 2,000억 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지지하였음.⁴⁾
 - 의장국이 최종합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자, Chandni Raina 인도 대표는 3,000억 달러는 너무 적다며, 개도국을 위해 더 큰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음.⁵⁾
 - 볼리비아, 나이지리아, 피지 등의 대표도 Raina 대표와 같은 목소리를 냈으며, Juan Carlos Monterrey 파나마 기후 특사는 합의 과정이 무질서하고 형편없었으며 요구되는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함.
 - 이번 합의로 인해 선진국이 연간 총 3,000억 달러의 기후재정을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나 외교 채널을 통해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구실이 될 수 있음.
- 한편, 당사국들은 선진국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음.
 - 1992년 제정된 UN 규정에 따르면, 특정 부국(대부분 서방 국가)은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반면,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국가들은 개도국으로 분류됨.
 - 개도국에 포함된 국가도 재정 지원을 제공해달라는 “요청(invite)”은 받지만,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되지는 않음.

1) New York Times, 2024.11.23.

2) Washington Post, 2024.11.23.

3) New York Times, 2024.11.23.

4) Washington Post, 2024.11.23., Politico, 2024.11.23.

5) Washington Post, 2024.11.23.

- 그러나 현재 다수의 부유한 국가들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별하는 것이 더는 타당하지 않고,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에도 기후재정을 제공하도록 강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 - 중국,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시키기 위한 서방 국가의 노력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으며 결국 실패로 돌아갔음.
 - 한편, 개도국들은 서방 국가가 앞서 수립한 기후재정 목표를 수년이 흘러 목표 시기가 지날 때까지도 달성하지 못했이라며 비난해 왔음.
- 당사국들은 COP28에서 합의된 “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”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였으나, 해당 내용을 담은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부하였음.
- 수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, COP29 최종 합의문에는 해당 문구조차 언급되지 못했는데,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이 이를 막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짐.